

외국의사 진료 허용 '초강수'... 시민 불안 고조

정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 공백 대응' 취지 밝혔지만
시민 "의료사고 누가 책임" 걱정
지역보건 "의료 질 하락 없어야"
급조 해결 지적도... "근본책 필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은 '민고 진료를 봐도 되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의료 전문가들은 "비상 시기를 타파하기 위한 급조 대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빠른 사태 봉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심각' 단계의 보건 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예고는 20일까지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 가능성이 해진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의사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까지 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 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국가, 학교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국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은 지난 2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떠난 후 공보의·군외관·진료보조(PA) 등을 투입했음에도 좀처럼 의료대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공백에 대응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난데없는 외국 의사 진료 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울여름 대학병원에서 출산 예정인 임산부 양모씨는 "담당 주치의가 최선을 다해 주긴 했지만 길고 긴 의료대란 속 '갑작스레 분만 수술이 취소되진 않을까' 불안했다"며 "하루빨리 사태를 봉합하려는 정부 입장은 공감하지만, 외국 의사를 수입하

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상당히 다르다. 한국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에 맞춰진 의료 시스템을 외국 의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걱정했다.

타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 국내를 찾는 이들의 우려도 크다.

신조야 고려인마를 대표는 "한국에는 의료 비자가 있다. 의료 기술이 선진적이란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와서 진료 받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로 들어온 많은 동포가 한국 의료에 감탄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외국 의사 진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잘 안다. 여기에 의료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책임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환자와 의사 간 불소통은 덤"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친 인원을 전문의 지도 하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지역 공공의료 관계자는 "의료선진국 의사들이 국내로 들어와 공공의료·기피과 근무 등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이는 몹시 이상적인 일"이라며 "낮은 수가·과로 등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로 들어오는 의사들은 대부분 의술을 배우러 오거나 자국에서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이들을 지도·관리할 전문의들은 또 어디서 구할지도 문제다. 의료 질 하락은 볼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의료분쟁 시 병원에서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 더욱이 중증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은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실을 책임지고 감수해 줄 교수·병원이 있을까"라며 "(짓갈, 김치 등) 음식에서부터 한국인은 체질이 다르다. 기초 배경지식이 없는 의사가 와서 진료를 보는 것은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되레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내과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말하는 '보건 의료 위기'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것이 아닌 당국 스스로 초래한 사태"라며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의사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급조된 지금 대책은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다면 정부는 외국 의사를 수입하지 왜 10년 후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강제로 늘리려하느냐"며 "스스로 촉발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 행정을 거두고 결자해지 자세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윤 정부 2년 '대일 굴종외교' 규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역사를 포기한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림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가지 현안과 과거사가 결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복핵 대응, 경제협력, 글로벌 사회 속 양국 공동 아젠다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2년간 대

일 굴종 외교, 대일 저자세 퍼주기 외교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와도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래'를 사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를 팔았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3자 변제'라는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덤터기 썼음에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등 뿐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래', '신뢰', '협력'만 주술처럼 반복한 채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한 일방적 구애를 읊조렸다"며 "윤 정권 2년은 미래를 구실로 역사를 포기한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고 초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낱말이 보여 준 것 외에는 더 평가할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주비 기자

광주·전남 일교차 15도 이상... 주말 비 소식도

광주·전남지역에 주말 동안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1일에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될 것이다. 비는 이날 저녁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10mm, 전남

서해안 5~20mm, 전남동부남해안은 80mm 이상이다.

10일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10일 아침최저기온은 8~14도, 낮최고기온은 21~26도가 되겠다.

11일 아침최저기온은 13~16도, 낮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측됐다. 정성이 기자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에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와 광주전남공동체의 충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월대책위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즉각 공개하라"

"종료 한달여 앞...의견수렴 촉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가 종합보고서의 초안을 즉각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라고 조사위에 촉구했다.

9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는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광주전남공동체의 충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조사위 활동 시한이 한 달 남짓한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인쇄, 국회

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의 절차까지를 고려하면 실제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의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더 촉박하다"며 "그러나 종합보고서 초안은 공식적인 심의와 의견 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아직 회부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근 송순태 조사위원장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6개 직권과제 보고서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 '정반대의 행보를 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조사위 상임위원장은 종합보고서를 통해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보고서의 왜곡과 부실 사태

는 충분한 심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데서 비롯됐다"며 "종합보고서와 관련 지금 조사위가 견고 있는 길은 개별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곡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종합보고서 초안 부실 왜곡으로 내모는 길을 가고 있는 조사위를 규탄한다"며 "전원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시간, 광주전남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을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심의와 광주전남공동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종합보고서는 차라리 채택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도 덧붙였다.

글·사진=강주비 기자